

## 남북한 통합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윤민재\*\*

남북한은 분단 이후 상이한 이념을 통해 이질적인 사회발전의 과정을 거쳤으나 언어, 역사, 혈연, 문화 등의 요소를 지닌 민족주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남북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남북한 통합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남북한통합을 위해서는 기존의 남북한의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주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개방적 민족주의로 정의될 수 있다. 개방적 민족주의는 남북통일공동체에서 성원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줄 것이며 남북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며, 다원적인 정치질서를 추구하고 탈계급적 탈냉전적인 사고를 지향한다. 이 민족주의를 통하여 기존 남북한이 보여준 위로부터의 강압적인 민족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서구에서 보여준 국민민족이 갖는 정치적 근대화와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민족주의는 혈연과 언어를 강조하는 종족적, 원초적인 성격이 강한 민족주의였다. 특히 북한의 민족주의는 주체사상에 기반한 통치를 위하여 민족주의가 왜곡된 형태로 변형되었으며, 남한의 민족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이념과 결합되지 않은 기형적인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남북한 모두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북한통합에 과정에서는 새로운 민족주의가 요청되는 것이다. 개방적 민족주의는 통합의 과정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창출에 맞는 정체성을 성원들에게 부여해줄 것이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민주화

\*본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을 밝힌다(과제번호: KRF-2000-037-CA0070).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관심분야는 정치사회학, 역사사회학, 통일 및 민족문제 등이다. 저서 및 논문으로는 《근대성 탈근대성 그리고 세계화》, 《그람시와 민족국가》, 〈향후 통일운동의 방향 모색, 화해와 협력의 장으로〉, 〈김구와 김규식의 민족주의〉 등이다(연락처: 전화 018-418-6005, E-mail: ysociology@hanmail.net).

의 과정을 추진할 것이다. 그것은 탈계급적, 탈냉전적 사고에 기초하여 시장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다원주의적 정치제도를 제도화하고 남북한의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이념적 좌표의 구실을 할 것이다. 단순히 정치적 통일만으로는 통합의 과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남북한의 통일론에 대해 현실주의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새로운 국가의 창출이라는 장기적인 과정을 전망하면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측면의 제도화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적 민족주의에 대한 검토, 전망이 필요한 것이다.

## 1. 들어가는 말

세계화와 탈냉전, 탈민족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한반도는 분단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0년 이상 한반도에서 진행된 분단의 상황은 독재국가, 병영국가, 권위주의국가 등 반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국가를 만들었고 사회적으로는 인권, 복지, 평등, 자유 등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와 혜택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분단의 극복과 그 극복을 통한 새로운 통일국가의 완성이라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이란 문제가 정치적인 결단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지만 사실 통일은 단순한 결합의 문제라기보다는 견고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통합의 과정을 거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에서 통일은 형식적인 의미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제도와 이념을 떠나 민족이라는 큰 틀 속에서 통일을 선취하자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나 통일국가도 하나의 현대적인 국가의 형식을 띠는 만큼 제도와 이념, 조직 등의 내용이 남북주민의 공통의 의지와 합의 속에 확보될 때 통일국가의 위상은 높아질 것이다.

통일국가란 공통의 역사, 전통을 복원하고 이질성을 최소화하며 동시에 동질성을 확장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담아 낼 수 있는 제도, 조직, 이념 등의 복합체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의 경험에서 보듯이 양 체제와 이념의 접합점의 도출과 동질적인 것의 확대는 상당한 기간의 공존과 교류를 필요로 할 것이다. 남북한은 분단이후 상이한 이념 속에서 이질적인 사회발전의 과정을 거쳤지만, 분단이전의 언어, 역

사, 혈연, 문화 등의 공통의 요소를 지닌 민족주의의 특징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세계화시대에 폐쇄적인 민족주의로 나갈 가능성도 있으나 남북한의 개혁과 개방이라는 흐름 속에서 남북한 통합에 필요한 민족주의로 발전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북한은 집단적 단수로서 민족을 상정하면서 자주성의 원칙 속에서 객체 또는 대상으로서의 외세를 지양하고 투쟁하는 것으로 민족을 이해하고 있다(송두율, 2002: 86-87). 세계화를 북한은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해관계가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견고한 질서를 형성하는 일체화로 이해하고 있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북한은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을 비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한 집단인 민족이 외부의 대상인 외세에 대하여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정립함으로써 민족의 이익을 지킬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때 민족의 이익과 번영은 세계화의 현상과 공존할 수 없으며 하나로서의 민족이라는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것'들이 민족적인 것으로 수용될 수 없다. 반면 남한은 세계화를 한반도의 질서 속에서 무시할 수 없는 동시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면서 세계화의 흐름과 남과 북의 문제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내세우는 자주성의 문제를 남북한의 고유한 영역으로 환원시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송두율, 2002: 94). 이러한 대립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의 차이를 상호공존과 상생의 원리 속에서 존중하고 그러한 차이를 통일의 과정 속에서 발전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양자간에 존재하는 차이와 대립, 갈등과 적대를 공존과 상생의 원리 속에 통합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남북통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힘을 본 논문에서는 개방적 민족주의라고 정의내리고자 한다. 개방적 민족주의는 남과 북의 기존의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과 극복, 21세기 통일한국에 적합한 새로운 민족주의를 말한다. 개방적 민족주의는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적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이론체계이자 적대적인 이념과 계급을 통합할 수 있는 이념을 말한다. 이러한 개방적 민족주의는 몇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방적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남북한의 통합의 내용과 과제들을 설명하기에 앞서 개방적 민족주의를 정의내리

고자 한다. 첫째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보편적 인류애를 기반으로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확대시키는 이념적 지향점이자 세계로 열려 있는 이념이며 주변국가들과 평화공존을 목표로 한다(김동성, 1995: 349). 둘째 민족공동체의 영토에 대해 다른 국가와 민족에게 개방적인 자세를 보이고 타 민족성원들에게 같은 지구공동체의 성원으로 인정하는 가치를 말한다. 셋째 사회계급의 통합과 이념적인 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친화력과 포용성을 갖는 가치체계를 말한다(진덕규, 1993: 120). 다섯째 자주적인 입장에서 외국과의 협력을 추구하며 남북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도진순, 1997: 6).

이러한 특징을 갖는 개방적 민족주의는 분단이후 남북한이 보여준 민족주의에 대한 역사적 성찰과 그 한계에 대한 극복을 통하여 이해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남북한의 민족주의는 계급대립적이고 체제수호적이며 대외의존적인, 위로부터의 민족주의의 성격이 강하였다. 서구의 민족주의 형성에서 나타나는 민주적인 요소와 자유와 평등이라는 보편적인 이념을 남북한의 민족주의는 수용하지 못하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국가주도로 강압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수단으로서 민족주의를 동원한 측면이 강하였다. 따라서 민족국가와 민족주의형성이 시민혁명을 통하여 근대사회의 과제, 즉 모더니티의 과제들을 수행해간 서구와는 다른 모습을 남북한은 보여주었다. 물론 서구의 민족주의는 부르조아계급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비서구지역에 대한 편견과 배제의 논리, 그리고 종족적인 요소도 강하게 지니고 있는 면도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향한 서구의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세계화 시대에 새롭게 성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바탕으로 남북한의 분단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조건을 고려한다면 통일한국의 미래에 걸맞는 새로운 민족주의의 형성, 즉 개방적 민족주의의 형성은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 2. 서구의 민족주의 특징과 교훈

### 1) 서구의 민족주의의 특징

민족주의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힘들다. 민족과 국가마다 역사적인 발자취가 다르고 네이션(nation)이란 말이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민족주의를 구성하는 요소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민족주의는 역사적 상황과 그 추진세력에 따라 복잡한 기능을 수행해왔고, 민족국가(nation state)형성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둘러싼 개념정의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서구의 민족주의는 민족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자본주의의 성장, 근대적인 정치체도의 도입, 대중통합을 위하여 정치적인 결단의 문제로서 채택된 성격이 강하였다. 전통적인 봉건적 신분질서를 철폐하고 평등과 자유의 내용을 핵심으로 대중들을 동등한 성원으로 국민으로 편입한 것이 서구의 민족국가였다. 서구의 민족주의는 서구 역사의 근대화과정 속에서 발생한 역사적 산물이었다. 그것은 계몽주의적 사고에 기초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모더니티의 과제를 현실적인 수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정치적 수단이었다. 이 때문에 서구의 민족국가형성과정은 절대군주제에 대한 저항, 새로운 정치질서로서 자본주의 질서의 확립과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서구의 국가마다 다른 유형의 정치질서를 가져다 주었다. 하나는 인종민족(Volksnation), 또는 문화민족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민족(Staatsbürgernation)이다(한승완, 2001: 234-9). 인종민족은 민습적이고 문화적인 공통성에 기초하여 민족에 대한 관념이 형성된 공동체를 말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민족이 독일민족이다. 이 공동체는 언어, 공통의 문화유산, 관습 등을 기초로 형성된다. 즉 객관적인 요소가 민족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서구의 민족국가 형성에 앞서 민족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며 근대 국가의 근대성의 문제는 민족과 민족주의와는 큰 관련성이 없는 것이다. 민족적 결속력, 동질성은 근대국가의 형성과는 관계없이 이미 존재하는 것이며, 민족주의도 원초적 유대감이 양적으로 늘어난 것에 불과한 것이다(임지현, 1999: 22).<sup>1)</sup>

문화민족은 독일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독일에서는 신비롭고 관념적인 민족정

신에 대한 호소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와는 달리 여러 개의 지역국가로 쪼개져 있던 독일민족을 하나의 민족공동체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초적인 민족적 특성에 호소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과 같은 문화민족은 민족의 객관적인 요소를 강조하게 되었고, 매우 비합리적이고 낭만적이며 전근대적인 민족주의의 성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문화민족은 민족적 특질을 고수하는 면에서는 유리하였지만 종족적 공동체의 특성이 강하였기 때문에 근대적인 국민국가형성이라는 현실적 과제에는 취약할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하여 자유주의, 민주주의라는 근대적 가치가 국민국가형성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못하고 비합리적이고 비자유주의적인 민족주의 형태가 독일국가에 장애물로 남아 있게 되었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는 근대국가형성과정이 구성원의 평등한 법적 지위를 기반으로 하여 민족이 구성되는 국민민족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것은 고대 서구에서 내려오는 전통인 혈통, 민족을 초월하여 평등한 시민권을 가진 성원들이 지배하는 민주주의라는 체제에 기반하고 있다.<sup>2)</sup> 이러한 근대적 국민국가는 민습적,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차이와 배제를 극복하여 보편적 국민성(nationality)을 획득해 나갔다. 이들 국민국가는 대부분 시민혁명을 거쳐 근대적인 국민국가를 형성해갔다. 시민혁명을 통하여 각종 봉건적 특권이 제거되고 신민(subject)이 국민으로 통합되는, 즉 형제적 우애라는 구호아래 구성원에 대한 법적차별이 배제

1) 국민민족과 인종민족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방식을 비판하는 논자들도 있다. 양 요소가 혼재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으며 명확하게 한 요소만 갖고 출현한 민족은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대표적인 논자로는 스미스(Anthony D. Smith), 칼호운(Craig Calhoun), 맥크로네(David McCrone), 닐센(Kai Nielsen) 등을 들 수 있다. 숄만(Stephen Shulman)은 이러한 입장에서 민족의 정체성의 기준을 시민적인 것들(영토, 시민권, 의지와 동의, 정치이데올로기, 정치제도), 문화적인 것들(종교, 언어, 전통), 인종적인 것들(조상, 혈통)을 제시하고 있다(Stephen Shulman, 2002).

2) 서구의 인종민족과 국민민족은 ethnos와 demos의 전통과 관련되어 있다. ethnos는 풍습, 식민, 이주에 대한 기억을 근거로 혈통적 공통성에 대한 신화적인 믿음을 지니고 있는 집단을 말하며, demos는 혈통을 초월하여 동일한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동일 공동체에 속한다는 지연공동체를 의미한다. : 한승완(2001), "통일민족국가 형성을 위한 시론", 《사회와 철학1》이학사, p.235.

된 동질적 민족사회로 나가기 위해 국민을 통합하고 결집시켰다.

국민민족은 법적 동등권을 획득한 시민공동체로 발전해 나갔고, 통일된 언어, 법률, 행정체계, 관료제 등이 국민통합을 강화하면서 국가권력은 모든 인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고 방식을 뿌리내리게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국민국가는 민족의 경계와 국가의 경계를 동일시하는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이때 민족은 동일한 법률의 지배를 받는 인민집단이라는 점에서 봉건적인 위계질서의 성원과는 대립되는 개념이 될 수 있다(박호성, 1997: 38-9).

하버마스는 이러한 두 가지 속성을 민족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한다. “민족(nation)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공적 시민들의 의욕된 국민은 민주적 정통성의 원천인 반면, 동포들의 탄생적 민족은 사회적 통합을 받쳐준다. 시민들은 자기의 독자적 힘으로 자유평등한 정치적 결사체를 구성한다. 동포들은 공통된 언어와 역사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체 속에 이미 존재한다. 평등한 권리공동체의 보편주의와 역사적 운명공동체의 특수주의 간의 긴장이 국민국가의 개념 속에 박혀 있다”(하버마스, 2000:145).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문화적, 인종적 공동체와 정치공동체의 특징이 바로 근대국민국가의 핵심인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성격이 조화로운 가운데 인종적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파괴적 현상을 국민국가의 합리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원리로 축소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 2) 서구의 민족주의의 교훈

독일은 통일 후 나타나는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문화적인 민족주의 차원에서 치유하고 통합을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회주의가 몰락한 이후 새로운 정치질서로 동독인민들을 서독이라는 하나의 국가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시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였다. 이것은 민주주의 긍정적 요소들을 민족주의라는 틀 속에 새롭게 주입하는 통합의 정치였다. 이러한 점은 남과 북이 분단을 극복한 후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진지하게 고려할 내용이 될 수 있다. 종족적이고 혈연적인 요소가 강한 우리 민족의 경우 서구의 경험처럼 시민혁명, 산업혁명이 부재한 상태에서 식민지독립이라는 저항적 민족주의가 우세한 상황 속에서 분단국가를 경험하였다. 분단국가는 상이한 체제를 기반으로 한 견고한 정치체였으나

그 밑바탕에는 합리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즉 공화주의적인 요소가 전혀 없이 국민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국가의 정통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폐쇄적이고 전근대적인 민족주의의 형태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통합을 지향하는 단계에서는 폐쇄적인 민족주의가 아닌 개방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강조되는 민족주의가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이다. 통일은 단순히 남과 북을 과거의 상태로 회복하는 재통일이 아니라 새로운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물론 종족적, 문화적 민족의 특징이 남북한 통합에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단일문화, 단일민족의 정체성만 강조하면 21세기에 필요한 다원적이고 개방적인 정체성확보는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단일민족의 정체성을 통해 시급한 남북한동질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으나 새로운 공동체건설에는 동질성 만큼 성원들간의 인권, 차이와 이질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민족주의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다차원적인 정체성을 요구하는 탈근대시대의 국민국가(통일한국)의 과제이자 근대적 의미의 국가를 새롭게 재규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 3. 남북한 민족주의의 특징과 한계

#### 1) 남한의 민족주의

##### (1) 민족주의의 주체

남북한의 민족주의의 근원을 파악하는 문제는 명확하게 설명될 수 없는 내용을 지니고 있다. 통일신라시대부터 민족주의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19세기말 개항기 이후 나타난 위정척사운동, 동학혁명, 애국계몽운동을 그 기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반면 3.1운동부터 민족주의의 전개과정을 논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렇듯 남북한의 민족주의 기원에 대한 설명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개인적인 논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민족주의는 같은 혈통에 근거한 거래, 동포라는 개념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민족의 공통요소로서 혈연적, 문화적 전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민족의

주요한 요소로 영토의 공통성을 들 수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계는 한민족의 생활경계이자 주변열강으로부터 한민족을 보호해야 하는 무너질 수 없는 정치적 경계였다. 그렇기 때문에 1945년 해방이후 남과 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과거의 영토를 회복하여 공통의 생활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열망은 강할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은 민족의 자의식이라는 주관적 측면으로 한민족의 공속의식, 귀속의식, 집단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면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면은 민족통합과 결속에 유리한 면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나 지나치게 원초적인 민족주의의 성향을 강조함으로써 서구의 경우처럼 정치적인 근대화, 시민적 민족주의의 특성이 스며들기는 힘들었다. 물론 여기에는 해방직후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둘러싸고 좌우이데올로기가 민족주의와 결부되어 민족주의가 왜곡되고 형해화되는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

또 하나 한민족의 민족주의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저항적 민족주의의 요소이다. 개항이후 서양열강의 침략에 대응하여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동학, 위정척사운동, 애국계몽운동 등이 출현하였다. 세가지 운동은 주체세력, 이념적 지향성, 대외적 인식의 문제 등에서 큰 차이점을 보여주었지만, 사회내부의 근대적 개혁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웠다. 즉 남북한 민족주의의 근대화=반봉건의 입장보다는 외세의 침략에 대한 대항이라는 저항적 민족주의의 요소가 강하였다. 저항적 민족주의의 요소가 강하였기 때문에 서구형의 경우처럼 자본주의화, 산업화, 사회의 근대화라는 작업이 민족주의의 발전과 함께 진행되지 못하였고 근대화의 과제는 뒤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민족주의의 추진세력이 서구의 경우처럼 보편주의와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시민계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력한 추진세력이 부재하였고, 서구의 경우처럼 공화주의적 요소가 전 사회에 걸쳐 확산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저항적 민족주의는 민족의 공동운명체적인 의식과 규범을 확산시켜 반외세운동을 20세기 이후 남북한 민족주의의 큰 흐름으로 작용하는데 기여하였고 일제식민지 하에서 전 민족을 결집시켜 자주독립의 문제를 전민족 과제로 만들었다는 긍정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었다.

해방직후의 남한의 민족주의는 자주독립국가의 완성과 식민지잔재 청산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남한의 민족주의는 위로부터의 민족주의와 국가주도의 민족주의의 성향이 강하였다.<sup>3)</sup> 해방직후 지배권력의 형성자로 등장한 미군

정은 반공주의를 강력한 질서유지의 보루로 삼았다. 반공주의의 확산은 좌파세력을 배제하면서 우파세력의 민족주의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좋은 이데올로기적 무기였다. 이들은 미군정의 직간접적 지원을 배경으로 하여 찬탁=친소=좌파=반민족성이라는 등식을 동원, 자신들의 반민족적이고 비민주적인 속성을 왜곡시키는 논리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극우세력의 논리는 민족통합과 통일국가수립이라는 논의를 절치히 배제하는 극단적 민족주의의 형태로서, 자신을 절대선, 타자를 절대악으로 구분하는 흑백논리에 다름아니었다. 극우세력의 반탁반공투쟁의 논리는 극우반공주의세력의 민족주의의 핵심이었다. 그러한 논리를 따르지 않는 세력은 전부 반민족, 매국적 세력으로 규정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은 철저히 분단체제를 지향하는 것이었고 탈계급적인 노선을 지향한 중도파마저도 민족통합세력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극단적 논리였다. 따라서 20세기 국제질서의 냉전논리로서 반공주의는 이에 역행하는 모든 정치세력의 존립근거를 파괴하였고 대중들의 민족적인 연대의 형성을 방해하였다(이종영, 1988: 41).

민족문제를 반탁과 반공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이승만과 한민당 등 극우세력에게는 단정수립운동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서중석, 1995: 134-5). 이러한 민족주의의 형태는 제1공화국수립 이후에는 반공법 등 법제도의 정비와 교육, 행정 제도등의 개선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을 하나의 반공체제로 포섭하는 국가주도의 민족주의로 나타났다. 국가적 민족주의는 동원과 통합의 기능을 외부적 대상을 통해 강제적인 방식으로 실현하면서 반공주의를 이용하여 민족주의의 국가주도의 성격이 지닌 결점을 보완하였다(윤해동, 2000: 67).

남한의 국가는 반공과 자유민주주의를 동일시하고 경제질서면에서는 시장만능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에 초점을 맞추었다. 서구의 근대민족국가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는 퇴색되고 반공주의를 우선하고 그에 대한 수단으로서만 자유민주주의가 강조될 뿐이었다.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는 남한의

3) 남북한의 민족주의는 냉전체제 수호논리로서의 민족주의의 성향이 강하였다. 남북한은 철저히 상대방을 배제하고 자신만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배제의 민족주의였다. 또한 민족성원들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과 권력의 유지를 위한 민족주의였다. 남북한의 민족주의는 성원들로 하여금 국가지상주의사고의 메카니즘을 갖도록 하였다: 홍윤기 (2002), "민족주의와 통일이념", 《21세기 한반도 어디로 갈 것인가?》 동녘, pp. 408-10.

극우세력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그들의 폭력적 정치지배와 비합리적인 정치논리를 국가성원이 수동적으로 내면화하게 만드는 정치수단으로 전략하였다.

이와 같이 해방직후 이후 남한의 민족주의는 서구의 근대민족주의가 정치질서의 원리로서 추구하였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과 결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개인의 자율적인 정치의식과 비판의식은 성장하기가 어려웠고 국가가 주도하는 정치질서에 강제적으로 포섭되는 경우가 많았다. 민주적, 민족적으로 정통성이 결여된 집권층은 정통성확보와 정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와 민족을 등치시키면서 자율적이고 비판적인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시민사회를 극도로 억압하였다. 민족이 국가와 동일화되면서 국가에 대한 비판은 반민족적인 행위로 규정되었고, 특히 냉전질서가 강화되면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세력은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파괴하는 반민족적인 친북세력으로 호도되기도 하였다. 남한의 국가의 성장과 발전은 안정과 질서를 강조하는 논리로 발전하였고 민족의 발전은 철저하게 반공의식을 바탕으로 총력안보와 국민총화를 요구하였다. 민족의 개념을 북한의 주민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면서도 실제로는 반공과 반복에 기초한 민족의 정통성을 강조하였고, 반개인주의적인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민족주의를 그 밑바탕에 두고 있었다. 국가적인 가치가 우선시되는 상황 속에서 민족주의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웠고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는 철저하게 배제될 수 밖에 없었다.

## (2) 민족주의의 정치사회적 논리

극우보수지배세력은 자신들의 정치질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주도의 강력한 성장위주의 경제발전 정책을 채택하였다. 제1공화국은 미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수입대체 산업화를 추진하였고, 박정희 정권은 국가주도 수출산업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선성장 후분배, 선성장 후통일'의 논리 속에서 박정희 정권은 안보와 경제발전 이데올로기를 결합시켜 나갔다. 이것은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 이상을 국가안보와 성장위주의 경제발전의 논리로 대체한 것이었다(조민, 1994: 102). 이때 민족주의는 국민들에 대한 강력한 동원의 이념으로서 작용하기 보다는 성장과 발전이데올로기, 그리고 안보이데올로기를 보완하는 틀 속에서 움직였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자원동원과 권위주의 방식을 결합한 위로부터의 민족주의였으

며,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를 철저히 배제하고 냉전체제와 분단을 공고히 하는 닫힌 민족주의였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민족주의는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로부터 서서히 도전받기 시작하였다. 한일국교정상화를 둘러싼 갈등, 1970년대 대외적 종속과 선성장후통일 논리에 대한 반체제세력의 도전, 그리고 1980년대 이후 고조된 반미운동, 통일운동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주의운동은 근대국민국가형성에서 나타난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민주주의를 시민사회에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라는 진지한 고민을 결여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의 민족주의 운동은 계급갈등, 지역문제, 성장과 분배의 문제 등을 결합시켜 시민사회 내부에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불충분하였다.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민족주의의 담론은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 성숙되는 조건을 마련하기 보다는 오히려 퇴행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저항적인 반미민족주의운동은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이며 개혁주의적인 시민운동의 담론에 의해 약화되면서 시민사회의 하나의 축으로 설정되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러나 아직도 노근리 문제, 미군범죄문제, 미행정협정문제 등 시민사회에서 제기되어야 할 많은 민족적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이 민족국가이고 앞으로 다가올 통일한국도 국민국가, 민족국가라고 할 때 민족주의는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유효한 담론일 수 있다(김동춘, 2002).

현재의 시점에서 필요한 민족주의는 타자의 정체성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종족적 민족주의의 협소한 틀에서 벗어난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민족문제를 사회의 민주화 문제와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하며 통일의 문제를 단순히 1민족 1국가라는 운명적인 논리에서 사고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세계화 시대의 흐름을 주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밑바탕에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소중히 하면서 과거의 편협한 민족주의를 벗어난 통합적 민족주의, 개방적 민족주의가 있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 2) 북한의 민족주의

### (1) 민족주의의 주체

해방직후부터 1960년대 전까지는 북한은 민족과 민족주의 개념에 있어서 사회

주의의 원칙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해방직후 북한은 민주기지를 민족해방론의 주요한 원칙으로 내세웠다. 민주기지노선은 미제의 침략에 대처하려는 반제반미투쟁노선이고 혁명력량의 강화를 위한 민주주의적 근거지를 튼튼히 하여 전조선혁명을 완수하려는 전략이라고 북한은 강조하고 있다. 이에 입각하여 북한은 토지개혁, 산업시설의 국유화, 노동법령공포, 인민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추진하였다. 이 때 북한은 민족주의 문제를 사회주의의 대원칙 하에서 이해하였다. 스탈린은 민족을 “언어와 영토, 경제생활, 심리적 상태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오랜 역사를 거쳐 형성된 인간의 견고한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스탈린, 1988: 45). 스탈린은 민족형성의 핵심적인 요소들로 경제생활의 공통성, 거주지역으로서 배타적인 영토, 언어, 문화, 전통의 공통성 등을 든 것이다.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요인이었다. 스탈린의 민족문제에 대한 경제주의적 이해는 자본주의의 타파를 통하여 민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당시 맑시스트 들의 공통된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북한도 사회주의 국가로서 스탈린의 민족정의를 수용하였다.

북한은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민족문제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키게 된다. 대외적으로는 스탈린의 사망과 중소분쟁, 대내적으로는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이 그 변화의 원인이 되었다. 중국과 소련의 대립이 심각하게 됨에 따라 북한은 주변 사회주의국가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 자주적인 노선을 걸으면서 김일성의 완전한 권력장악을 위한 시도를 하였다. 1960년대는 북한에서 민족주의가 최고조로 달한 시기였다. 이 당시 북한은 민족을 “언어, 지역, 경제생활 및 문화의 공통성에 의하여 표현되는 심리적 상태의 토대 위에서 발생하며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라고 정의한다. 70년대에 들어와서는 민족을 “언어, 지역, 경제생활, 문화와 심리 등에서 공통성을 가진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라고 정의한다(국가안전기획부, 1995: 25). 1970년 발간된 철학사전에서 정의된 이 부분에서 북한은 언어의 공통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규정한다. 이 정의방식은 스탈린의 정의와 차별을 보이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민족주의는 인민들간의 친선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 자체의 민족적이익과 근로대중의 계급적 이익에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강조한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민족적, 사회적 해방

을 지향하며 민족의 근본이익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민족주의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강조한다. 민족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으나 민족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정의하였고, 긍정적인 측면을 조선 사회의 현실에 맞게 수용, 발전하여 인민대중의 이익에 복무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1973년에 발간된 정치사전에서는 민족을 “언어, 지역, 경제생활, 혈통과 문화, 심리 등에서 공통성을 가진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라고 정의한다(국가안전기획부, 1995: 37). 그리고 언어가 민족을 특징짓는 공통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언어의 공통성에 의해서만 경제생활과 문화와 심리의 공통성이 이룩되고 공고화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985년 간행된 철학사전에서는 민족을 “핏줄과 언어, 영토와 문화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생활단위이며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 씨족 해체된 다음 사람들이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장구한 역사적인 투쟁과정에서 핏줄과 언어, 영토와 문화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결합되면서 형성된 집단”이라고 정의한다(국가안전기획부, 1995: 54). 이 정의에서는 경제생활의 공통성이라는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 그리고 핏줄과 언어, 영토와 문화의 공통성이 민족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이 가운데서 특히 언어를 강조한다. 핏줄이 같고 같은 영토 안에 살아도 언어가 다르면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며 공고한 집단으로 결합될 수 없으며, 언어는 민족의 자주意識과 창조적 능력을 키워주는 기본 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민족은 자주성을 옹호하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가는 사회생활의 기본 단위이며 혁명과 건설의 투쟁단위이며,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근본 속성이라고 주장한다. 민족의 자주성이란 자기 운명을 책임지고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민족의 성질이라는 것이다. 민족의 자주성이 있어야 다른 민족에게 동화되지 않고 핏줄, 언어와 문화의 공통성을 고수할 수 있으며, 민족은 이러한 자주성을 실현해 나가는 생활단위이자 역사적인 공동체라는 것이다. 핏줄과 언어의 강조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민족과 자주성의 개념 연결은 1980년대 이후 주체사상의 변화와 대외정세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도 제6차 당대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당대회에서 김중린은 “민족이 있고서야 혁명과 건설이 있을 수 있고 사상과 이념도 있을 수

있으며 민족을 떠나서는 그것이 다 무의미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사회주의 원칙보다 민족을 우선하는 입장은 1980년대 이후 맑스-레닌주의를 폐기하면서 주체 사상을 새롭게 정립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 1986년 김정일은 ‘민족제일주의’를 주창하면서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 민족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정신과 높은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깔보고 남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 당과 인민들에게 충실할 수 없으며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김정일, 1986). 1989년에도 김정일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더욱 강조한다. 그는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 살고 있는 긍지와 자부심이며 북한은 사회주의의 모범국가라고 평가하였다. 김정일은 당중앙위 연설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더욱 빛내어 나가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로 발현되는 숭고한 사상 감정입니다”라고 설명하고 그것은 인종주의나 민족배타주의와 어떤 관련성도 없음을 강조하였다(김정일, 1989). 또한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이며,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할 때 민족자주정신을 높일 수 있고 사회주의를 견고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정당화하는 논리이자 국내외의 변화에 대한 북한식의 대응논리였다.

또한 북한은 북한의 구체적 실정에 맞고 인민의 지향과 이익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식의 사회주의를 주장한다. 북한은 우리식의 사회주의를 주체사상에 기초하며 이에 의하여 발전되는 사회주의라고 정의한다. 사회주의도 북한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하며 민족적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될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식의 사회주의 개념은 더욱 정교화된다. 먼저 조선민족제일주의는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으로 하는 자부심이며, 당의 영도를 받는 긍지라고 규정한다. 또한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사람중심의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자부심이며, 우리식 사회주의는 사람중심의 사회주의이자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요구를 구현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다(김일순, 1990). 김정일은 1991년 발표한 논문에서 “나라와 민족은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결합체이며 운명공동체이며 혁명과 건설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사회적 집단의 이익, 인민대중의 이익도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실현

되어 나갑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인민대중은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는 자기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해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전상인, 1994: 108). 이것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매우 수세적이며 방어적인 체제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의 고수인가 아니면 죽음인가라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었다. 사회주의권이 붕괴함에 따라 사회주의도 강조하면서 우리식을 강조하여 북한사회주의가 사회주의의 마지막 보루이며 자신들이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인식은 민족주의의 문제도 주체사상의 틀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으며, 주체사상의 실현을 통해서만 사회주의의 제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체사상은 북한 식의 민족주의 체계이자 절대적인 이념체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북한의 노선은 일반적인 사회주의 원칙과는 큰 괴리가 있으며 맑스가 주장한 사회주의의 과학적 원칙과는 큰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식의 민족주의는 서구의 낭만적이고 문화적인 민족주의의 요소를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민족의 기본 요소인 혈연과 언어를 강조하는 원초적 민족주의 유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인식은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전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고조선과 고구려, 고려에 대한 강조는 북한의 민족사적 정통성의 확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1993년 10월에 북한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단군릉 발굴은 그 절정을 이룬다. 북한은 단군릉을 발굴하면서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와 단군을 시원으로 하는 민족적 단일성이 입증되었으며, 민족사를 주체적 입장에서 체계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작업은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위기에 처한 주변 사회주의국가와 차별성을 보여 인민들의 동요와 저항을 막고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다.

김일성 사후 북한은 ‘수령은 곧 우리 당이고 우리 당은 곧 김정일 동지’라는 구호 아래 체제결속을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1997년 당 총비서에 취임한 김정일은 1998년 9월에는 권력구조의 개편을 단행하여 공식적인 권력승계를 마무리 하였다. 또한 1998년에는 헌법을 ‘김일성헌법’으로 명하고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받들고 김일성의 유훈실천을 북한의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1995년에는 붉은기사상을 내세워 ‘혁명의 영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이자 영

도자와 생사운명을 끝까지 같이 하려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정치방식으로서 인덕정치와 광폭정치를 밝히면서 김일성이 개척하고 이끌어온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 완성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북한이 인덕정치와 광폭정치를 강조하는 것은 수령, 당, 대중이 사상의지적으로 혼연일체되어 단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북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패성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면을 북한은 수령, 당, 대중이 운명을 같이 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 즉 혁명적 대가정이라는 개념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김정일체제의 선군정치와 1998년 등장한 강성대국론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강신창, 2001: 199).

## (2) 북한민족주의의 한계

북한의 민족에 대한 이해와 민족주의는 몇차례 논리의 변화를 보여주었지만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도노선과 체제결속에 중점을 둔 변화였고 북한식의 사회주의 고수에 더 강조점을 두면서 민족주의를 그 하위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조선민족을 김일성민족으로 등치시킨 것은 체제연장의 논리로 민족주의를 바라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남북한 민족주의의 접점과 상호화해의 가능성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해방직후부터 지금까지 반제반봉건주의를 표방하면서 인민중심의 계급주의적인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었다. 또한 저항적 민족주의에 기초하여 대외교류나 개방적인 측면을 간과하였고 남한을 민족해방의 관점에서만 인식하였다. 1960년대 이후부터는 주체사상을 주요한 지배이데올로기로 정착시킴으로써 민족주의를 사회주의 속에 내면화하였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통하여 의인화된 권위주의체제를 지향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일인체제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민족주의를 수단으로 전략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민족주의는 결국 배타주의와 국제적 고립을 가져왔고 개방적인 사회주의체제로 나가는 길을 봉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은 우리식사회주의에서 보듯이 민족개념을 재정립하면서 북한의 역사적 정통성 고양을 위한 작업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여 경제적 실익을 위하여 개방의 자세도 어느 정도는 보일 것이며 동시에 주민에 대한 통제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김일성 사후에도 북한은 김정일 체제하에서 사

회정치적 생명체론이나 사회주의 대가정의 개념 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민족주의에 대한 대처는 대외적인 상황변화에 따른 특수한 사정이 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민족주의는 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체제의 틀이라는 편협성을 벗어나야 한다. 북한의 민족주의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일은 남북 간의 전쟁재발을 막고 세계적인 탈냉전의 상황을 한반도에 정착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이럴 때 남북한의 민족주의는 폐쇄적이고 대립적인 틀에서 벗어나 통일과 화해, 협력의 내용을 갖춘 민족주의로 발전할 것이다(서동만, 2000: 189-90). 통일의 과정에서는 남한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만큼 남한은 적극적으로 남북화해와 협력의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북한과의 대치국면을 종식하고 폐쇄주의적이고 체제유지적이며 종족적인 민족주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개혁적인 민족주의의 큰 틀을 찾아야 할 것이다.

#### 4. 남북한통합의 전망: 개방적 민족주의의 과제

##### 1) 남북한의 통일론의 접점을 찾아

1990년대 이후 북한의 통일론이 변화되고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됨으로써 남북한의 통일론은 어느 정도 접점을 찾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러한 통일론의 실천가능성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퇴행적이고 역행적인 흐름으로 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많다는 점도 사실이다. 그러나 양측의 통일안의 접점을 지향하는 가운데 통일의 현실적인 길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고 한반도에 전쟁과 대립의 골은 사라지고 평화가 정착되리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남한의 통일론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나 김대중정부의 통일방안 모두 남북연합이라는 국가연합을 과도기적인 통일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연방제의 내용은 변화하였으나 최근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도 남한의 연합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의 통일방안에는 국가연합의 요소도 내포되

어 있다. 양측의 공통점은 평화공존과 평화적 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고 통일을 향한 과도기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양측 안 모두 남과 북의 정부가 국방과 외교권을 갖고 독립된 실체로서 행동하며 점진적인 교류협력을 통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남한의 통일방안은 1민족2국가2제도2정부와 같이 중앙정부가 없지만, 북한의 방안은 1민족1국가2제도2정부로서 최고민족연방회이나 연방상설 위원회와 같은 중앙정부가 있다. 남측의 연합제는 교류를 통한 점진적인 통합을 강조하고 사실상의 통일단계를 거쳐 제도적인 통일을 목표로 한다. 반면 북한의 연방제는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지 통일이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북한의 연방제가 현실성이 있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상호협조하고 자제하는 전통이 정착되어야 하고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각 지방정부간의 동질감과 일체감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남북간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통일로 가는 과도기적인 첫 단계는 국가연합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연합제는 과도체제를 상정하고 있으나 연방제는 통일에 이르는 과도기적 단계가 생략된 채 곧장 정치적 통합형태인 연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분단현실을 무시한 접근방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조민, 2001: 26). 물론 1990년대 이후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점진적인 형태로 변화하였지만 중앙정부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측과 차이점이 있다. 체제와 이념, 삶의 방식에서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과도기적 체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연합이라는 국가연합형태가 필요할 것이다.

통일은 남과 북의 개혁과 변화를 요구한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신뢰가 쌓일 수 있고 남북연합이 가능할 것이다. 남북연합의 단계에서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적 색채를 배제하고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극복하면서 양체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으며 경제적인 이익과 복지적인 차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것은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요구한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양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측면,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공동체 형성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긴장완화와 군비축소, 상생원리에 바탕을 둔 협력적 경제통합, 민주주의 원리와 법 제도의 정비라는 작업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남북연합단계는 완전한 통일로 가는 과도기로서 공존, 공영, 공리를 전제로 하며 한쪽으로는 일방적 흡수보다는 세계화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국

민국가형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 밑바탕에는 서구의 국민국가형성과정에서 보여준 인권, 자유, 평등이라는 보편적이고 인간주의적인 철학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 통일은 단순히 국가와 국가의 통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국민국가를 형성한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한국민족은 오랜 역사와 문화의 전통을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통일은 과거의 것을 복원한다는 의미도 갖지만 분단이후 이질적인 체제와 사상, 삶의 방식을 각각 안은 채 살아온 남과 북의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동질성 만큼이나 이질성 또한 단시일 내에 극복하기 힘든 장애요소는 분명하다. 상이한 체제를 간진 남북한을 하나의 정치적 단위, 삶의 단위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교류와 협력의 과정을 통한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그것은 과거의 전통에 기초한 '상상의 공동체'로의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의 창조를 말한다. 새로운 공동체는 탈민족주의,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도 국민국가의 건설이라는 과제와 일치할 것이다. 그러한 공동체의 성원은 동질적인 국민,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갖게된다. 그러한 정체성이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균등하고 평등하며 대등하다는 성격을 가질 때 남북한 통합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에 바탕을 둔 국민국가의 건설은 해방직후 남북한 모두 외세의존적이며 타율적이고 독재주의적인 발전방식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남북한 공동체 건설에 합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목표와 전망의 제시, 그리고 정체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것은 국민으로서 일체감, 정체성을 확보하고 사회문화적인 이질성을 극복하는 일과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민족주의의 재평가와 비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재구성이 필요한 것이다. 새로운 남북한 공동체, 즉 통일한국의 통합과 발전의 이데올로기는 경쟁적이고 독점적인 자본주의나 국가사회주의적인 방식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통합과 발전의 이데올로기는 민족주의가 될 것이다. 이때 민족주의는 과거의 배타적 민족주의, 폐쇄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인류의 보편적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열린민족주의, 개방적 민족주의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민족주의를 통하여 국민국가의 건설과정에서 성원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공동의 신념체계로서 통합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통합의 이념으로서 민족주의는 남한과 북한의 정치이념을 포용하고 통합하는 힘으로 작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통일한국의 민족주의는 남한의 자본주의와 북한의 사회주의를 포용하는 통합과 발전의 변증법적인 지향을 해야 하는 것이다(우성대, 2000: 468). 새로운 정체성은 남북한통합공동체가 빠른 시일 내에 견고한 틀을 마련하기는 힘든 만큼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결속력을 도모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밑바탕에는 물론 민족주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하위이념으로서 어떤 체제이데올로기와 결합되거나 그것을 매개로 하여 바깥으로 표출된다. 남북한의 체제이데올로기는 대립적이고 적대적인 관계였으나 통일한국의 공동체에서의 이념은 하나의 체제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할 것이고, 민족주의는 그러한 체제이데올로기의 기능을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즉 남북한의 이질적인 체제가 결합된 상태에서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고 사회목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기초한 통일을 향한 첫 단계인 남북연합에서는 다음 단계인 연방제로 나가기 위한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과 북 모두 자신들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양 체제의 기능적 통합의 정도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며, 그리고 경제적 투자와 여건을 확충하기 위하여 군비축소가 요구되며 상호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과 통합의 정도를 높일 수 있는 문화적 통합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조류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상호 이해가 깊어질 수 있고, 통합의 정도를 높이면서 체제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 차이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 2) 정치사회적 통합의 과제와 민족주의

남북한 통일은 단순히 국가와 국가의 통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국민국가를 형성한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오랜 역사와 문화의 전통을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통일은 한국민족에게는 과거의 것을 복원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분단 이후 이질적인 체제와 사상, 삶의 방식을 각각 안은 채 살아온 남과 북의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동질성 만큼이나 이질성 또한 단시일 내에 극복하기 힘든 장

에요소임은 분명하다. 상이한 체제를 간진 남북한을 하나의 정치적 단위, 삶의 단위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교류와 협력의 과정을 통한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그것은 과거의 전통에 기초한 '상상의 공동체'로의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의 창조를 말한다. 새로운 공동체의 성원은 동질적인 국민,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갖게될 것이다. 이 정체성이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균등하고 평등하며 대등하다는 성격을 가질 때 남북한 통합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에 바탕을 둔 국민국가의 건설은 남북한 모두 외세의존적이며 타율적이고 독재주의적인 발전방식이 아닌 모든 국민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요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남북한 공동체 건설에 합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목표와 전망의 제시, 그리고 정체성 확보를 전제로 한다. 그것은 국민으로서의 일체감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사회문화적인 이질성을 극복하는 일을 요구한다.

새로운 민족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족공동체의 의식이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 민족공동체의식이란 민족의 상징 및 이데올로기와 상호작용의 관계 속에서 생성된다. 이것은 성원들에게 소속감과 연대감, 통합력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과 제도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때 민족통합의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강대기, 2001: 222-5). 이러한 통합과 연대, 발전의 이데올로기의 역할은 민족주의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민족주의는 과거의 배타적 민족주의, 폐쇄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인류의 보편적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개방적 민족주의를 말한다. 개방적 민족주의는 자주적인 입장에서 외국과의 협력을 추구하며 남북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도진순, 1997: 6). 이러한 민족주의는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적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이론체계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적대적 이념과 계급을 통합시킬 수 있는 이념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김동성, 2001: 48-9).

앞에서 언급한 민족주의는 정치적으로 다양한 이념분파를 수용하고 극단적인 대립을 완화하는 성격을 갖게 된다. 또한 통일한국 공동체의 개혁적 민족주의는 계급과 이념대립을 통합하고 그러한 통합을 통하여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길을 모색하는 나침반의 구실을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민족주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인, 자유와 평등, 인권의 가치들을 끊임없이 실현하며 민족주의가 지니고 있는 폐쇄성, 맹목적 애국주의, 종족주의 등을 극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현시점에서 국가연합을 지향하는 통일의 과정으로 간다고 할 때, 남북한이 내부에서 개혁을 이루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개혁의 내용은 남북한 체제와 이념의 중간영역을 지향하는 지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남한은 제1공화국부터 쌓여온 권위주의적인 지배형태를 완화해야 한다. 문민정부부터 권위주의가 약화된 것은 사실이나 유교문화에 기초한 권위주의적인 요소는 민주적인 정치문화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사실이다. 이와 함께 지역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에 기초한 파벌주의와 정치에 대한 불신, 냉소주의도 성원들의 자율적인 정치참여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전제적 권위주의와 국가가족주의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게 남아 있다. 또한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극도로 억압하는 집단주의적 경향이 배타적 민족주의와 맞물려 매우 전근대적인 정치문화를 형성시키고 있다. 이것은 북한주민의 수동적, 소극적 성향을 강화시켜 민주적인 정치질서에서 요구되는 다원성을 수용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임순희, 1997).

한편 남북 간에는 상이한 사회문화적 내용이 많이 있으나 공동체적 유대의식, 가족의 전통적 인간관계, 상부상조의 관습, 서열주의 등 유사한 전통적 특징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가치들을 중심으로 민족공동체의 결속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때 강한 동질성에 기초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고 정치적, 경제적 통합의 작업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남북연합단계에서 남북 사이에 형성되는 공통의 문화는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통일문화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러한 통일문화는 남과 북의 기존 체제에서 나타난 대립의 측면들을 해소하고 서로의 장점들을 부각시켜야 하며, 국제사회의 변화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체계와 부합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한 성원들에게 민족적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문화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문화공동체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윤덕희, 1994: 27-30). 남북한 교류증대화 동질화작업을 통해 북한 사회의 폐쇄성과 경직성이 극복되어 개혁과 개방은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이때 민족주의는 성원들에게 공동의 신념체계를 제공하여 상이한 체제에서 오는 이질성을 극복하는 공동의 신념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을 견고하게

만들 것이다.

## 5. 결 론

먼저 본 연구의 의미를 재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남북한의 민족주의를 본격적으로 다룸으로써 남북한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민족주의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열린민족주의, 개방적 민족주의를 말한다. 또한 한국의 민족주의의 역사적 흐름과 그 변화과정을 남북한을 통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서구식의 민족주의도 아니고 제3세계의 혁명적 민족주의도 아닌 통일의 완성이라는 근대성의 과제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한국의 고유한 민족주의의 내용들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작업은 기존의 정치학이나 역사학에서만 주로 이루어졌던 것을 사회학적인 시각, 즉 정치사회학적, 역사사회학적인 시각에서 검토한다는 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남북정상간의 만남 이후 앞으로 더욱 밀도 높게 진행될 남북간의 통일의 논의에서 대중들의 참여가 민주적으로 보장되고 다원적인 정치공간에서 합의의 이를 수 있는 기반의 조성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흡수통일과 무력통일을 배제한 화해와 협력의 통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대중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통일주체의 확립이 필요하다. 그 주체는 탈냉전시대에 요청되는 탈계급적이고 합리적이며 민족화합적인 세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개혁적 민족주의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남북한 통합사회에서 야기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미리 예단하고 그에 대한 진단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과거의 민족주의와 통일론의 논의들을 검토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개방적 민족주의의 시각에서 비판하여 대안을 내놓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것은 합리적이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남북한 통합의 정치적 모델을 제시하는 데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남북한의 통합을 전망함으로써 현재 남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류와 협력의 과정들을 재검토하고 상호 갈등과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남북한의 통합

의 패러다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분단 반세기가 훨씬 지난 현재 남과 북은 단순한 체제이데올로기의 대립을 넘어 남북주민 모두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사회, 문화, 정치 등 모든 방면에서 이질적인 간격을 넓히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분단이전의 공통의 역사와 혈통, 언어라는 원초적인 민족주의적이 요소가 남북한 사이에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분단이후 나타난 여러 가지의 적대감과 대립, 갈등은 그러한 과거의 동질성만으로는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안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하다. 그러한 차이와 이질성이 큰 만큼 통일의 과정은 타국가의 통일의 과정과는 다른 매우 신중하고 합리적인 방식이 요구된다. 급속한 통일을 통하여 위로부터 강압적으로 차이와 분열을 없애고 형식적으로 정치적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남북한의 통합은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로 남겨질 수 있다. 정치적 통일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닐 수 있고 완벽한 통합만이 통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일 후 닥쳐올 통일후유증에 대한 경제적, 경제외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의한 일방적인 흡수통일방식은 남과 북의 격차로 인한 지역갈등, 내부식민지화, 과다한 통일비용과 심리적 충격, 경제적 구조의 이질성으로 인한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강정구, 1995: 48-9).

따라서 통일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남과 북이 노력하되 중간단계에 부당한 협력과 화해의 과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최근 남과 북 사이에 무력충돌이 발생하였고 남한 내부에 통일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하지만 남북한기분합의서와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화해의 분위기는 21세기 통일국가의 형성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한다. 통일국가는 단순히 남과 북의 체제결합이나 점점을 찾는 일이 아니라 상호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점을 되살리는 새로운 국가를 창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 중간단계에서는 화해와 협력을 통한 남북한연합단계가 필요하다. 이때 남북한의 통합을 위해서는 과거의 폐쇄적이고 억압적이며 국가주도적인 민족주의가 아닌 개방적인 민족주의가 보다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민족주의를 통하여 남북한통일국가의 기본 틀을 완성할 때 통일 후 나타날 부정적인 요소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통합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할 중요한 과제임과 동시에

통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한쪽에서의 일방적인 흡수통일이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남과 북 사이에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평화와 공존의 원리를 함께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다. 과거 서독은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ktrin)을 포기하고 신동방정책을 추진하여 동서독간의 평화,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1민족2국가원칙을 수용하여 동독을 사실상 국가로서 인정하였다. 이를 통해 서독은 동독과의 교류,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고 통일 후의 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서독의 정책은 철저히 '선평화 후통일' 원칙에 기반한 것이었다(최의철, 신현기, 2001: 67-9). 또한 독일은 통일보다 접근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면서 동독에게 정치적인 신뢰의 표시를 다양한 차원에서 보여주었다. 서독 자체 내에서도 민주주의제도를 정착시키고 사회적 시장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성장과 평등의 사회적 기초를 마련하였다.<sup>4)</sup>

이와 같은 독일의 통일방식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남한의 체제가 우월한만큼 조급한 흡수통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일을 바라보고, 남북한체제의 비효율성과 비민주성, 비인간적인 것들을 고쳐나가면서 통일국가에서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연합단계에서부터 남북한 체제를 포용하는 통합과 발전의 전략을 모색해야하는 것이다. 즉 체제이데올로기를 통합하고 새로운 통일국가의 정체성을 부여해줄 수 있는 개혁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민족주의를 통하여 남북한의 이질성과 차이를 변증법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노력이 가시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동체가 사회적 시장경제를 견고하게 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적인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사회성원 간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합의를 유도해야한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전제로 한다. 즉 정치적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민주주의를 모색하면서 흡수통일보다는 북한이 시장경제와 다원주의체제를 수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해야 하는 것이다(황병덕, 1996: 109). 이러한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때 남북한연합단계에서 과거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은 종식되면서

4) 독일은 통일후 7년 동안 1조마르크를 투입하였다. 이것은 국내총생산의 4.5%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대부분 동독 지역의 낙후된 사회간접자본 확대와 사회복지비로 지출되었다. 서병철, "독일통일의 성공요인과 교훈", 《제2차세계대전 후 열강의 점령정책과 분단국의 독립, 통일》(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1999), p. 388.

통일한국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향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현 시점에서 개방적 민족주의가 중요한 검토 대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대기(2001),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서울:아카넷.
- 강신창(2001), “김정일체제의 선군정치와 군사”, 《북한정치의 이해》, 서울: 을유문화사.
- 강정구(1995), “민족과 통일”, 《한반도 통일국가의 체제구상》, 서울: 한겨레신문사.
- \_\_\_\_\_ (2002),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서울: 당대.
- 고성호(1999), “남북한 사회통합”, 인천대 평화통일연구소, 《21세기 한민족 통합론》.
- 고유환(2001), “통치이데올로기: 주체사상”, 《북한정치의 이해》, 서울: 을유문화사.
- 국가안전기획부(1995), 《북한의 민족주의 선전자료집》, 서울: 국가안전기획부.
- 김국신, 이유진(1992),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김동성(2001), “통일한국의 국가이념과 민족주의”, 《남북한통합의 이론과 실제》, 서울: 경희대학교.
- 김동춘(2002), “시민운동과 민족, 민족주의”, 《시민과 세계》 창간호, 서울: 당대.
- 김순규(1991), “북한의 초기통일정책”,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김의수(2001), “한국사회와 공동체”, 《사회와 철학1》, 서울: 이학사/철학연구.
- 김일순(1990),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의 본질”.
- 김정일(1986),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 김정일(1989),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 박영호(1994), 《통일 이후 국민통합 방안연구》, 서울: 민족통합연구소.
- 박호성(1997), 《남북한민족주의 비교연구》, 서울: 당대.
- 서동만(2000), “북한체제와 민족주의”, 《역사문제연구》 4호, 서울: 역사비평사.
- 서병철(1999), “독일통일의 성공요인과 교훈”, 《제2차세계대전후 열강의 점령정책과 분단국의 독립, 통일》,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 서중석(1995), “한국에서의 민족문제와 국가”, 《근대국민국가와 민족문제》, 서울: 지식산업사.
- 송두울(2002), 《경계인의 사색》, 서울: 한겨레신문사.
- 스탈린(1988), “맑스주의와 민족문제”, 서중건 역, 《스탈린전집1》, 서울: 전진.
- 신지호(2002), “남북경협발전 전략에 대한 고찰”, 《21세기 한반도 어디로 갈 것인가?》, 서울: 동녘.
- 우성대(2000), “남북한 갈등해결 메커니즘”, 《21세기의 남북한 정치》, 서울: 한울.
- 윤경태(1994), “민족문화공동체의 형성과 민족통일”, 《통일문화연구(上)》,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윤덕희(1994), “통일문화의 개념정립과 형성방안연구”, 《통일문화연구(上)》,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일연구원.

- 윤해동(2000), “한국민족주의의 근대성비판”, 《역사문제연구》 4호, 서울: 역사비평사.
- 위르겐 하버마스(2000), 《이질성의 포용》, 황태연 역, 서울: 나남.
- 이상만(1999),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의 경제구조”, 북한경제포럼 편, 《남북한경제통합론》, 서울: 오름.
- 이용필(1995), “기능통합의 이론적 기초: 접근법과 적실성”, 《남북한기능통합론》, 서울: 신유.
- 이종영(1988), “해방후 한국사회의 변동과 민족주의의 존립구조”, 《국학연구》 제1집.
- 이진우(1992), “개방적 민족주의와 세계평화”, 한국철학회, 《철학》 37집.
- 임강택(2001),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추진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 임순희(1997), “통일한국의 정치문화”, 《바람직한 통일문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임양택(2000), “남북한경제통합의 모형과 과제”, 《남북통일과 민족통합》, 서울: 홍사단출판부.
- 임지현(1999),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서울: 소나무.
- 임현진(2001), 《21세기 한국사회의 안과 밖》, 서울: 서울대 출판부.
- 전상인(1994), 《북한민족주의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정영철(2001), “북한민족주의의 전개와 특징”, 《현대북한연구》 4권 2호, 서울: 한울.
- 정윤재(1984), “민세안재흥의 신민주주의론 연구”, 《한국현대사회사상》, 서울: 지식산업사.
- 조민(1994), 《한국민족주의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_\_\_\_\_(2001), 《남북한 이념통합의 방향과 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 조혜정(1996), “남북통일의 문화적 차원”, 《통일된 당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조취각(2000), “민족통합의 이론적 배경” 《21세기 한민족통합론》, 인천: 인천대 평화통일연구소 편.
- 진덕규(1993), “한국민족주의의 미래구도”,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연구논총》 2권 1호.
- 최대석(2000), “주체사상과 북한체제”, 《현대북한체제론》, 서울: 을유문화사.
- 최의철, 신현기(2001), 《남북한통일정책과 교류협력》, 서울: 백산자료원.
- 최협(1992), “남북한 사회통합의 과제와 전망”, 《21세기 논단》 겨울호.
- 통일연구원(2002),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주민생활에 미칠 영향》, 서울: 통일연구원.
- 한승완(2001), “통일민족국가 형성을 위한 시론”, 《사회와 철학 1》, 서울: 이학사.
- 황병덕(1996), 《동서독간 정치통합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_\_\_\_\_(1998),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Anderson, Benedict (1983), *Imagined Communities:Verso*, 윤희숙 역,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서울: 나남.
- Giddens, Anthony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이윤희, 이현희 역, 《포스트모더니티》, 서울: 민영사.
- Kohn, Hans (1961), *The Idea of Nationalism*: Macmillan, “민족주의의 개념”, 백낙청 엮음,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창작과 비평사.
- Shulman, Stephen (2002), “Challenging the civic/ethnic and west/east dichotomies in the study of nationalism”,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Sage Publications, vol. 35, no. 5.
- Smith, A.D. (1986),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Basil Blackwell Publishers.
- \_\_\_\_\_ (1996), *Nations and Nationalism in Global Era*: Basil Blackwell Publishers, 이재석 역, 《세계화 시대의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 남지.
- Spencer, Philip and Wollman, Howard (2002), *Nationalism*: Sage Publications.

## The Political-Sociological Study of Integration of the South Korea and the North Korea

Yoon Min Jae\*

In order to create the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political, social, economical, and cultural problems must be solved together. Both side should learn to overcome heterogeneity through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nd get rid of the negative views of the two regimes. One of the major steps of unifying two countries is the role of the confederation to clear up the differences between the nations. Meanwhile, the nationalism, which should be open and reformed and bring new political system, need to be introduced to the community. This nationalism will lead to compromise and unification of the nations and result political and economical improvements. Using strong nationalism as a foundation to establish better relationship by focusing 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ut also breaking up antagonistic viewpoints and feuds. To promote social democracy to both South and North Korea, it should be based on open and innovative nationalism.

---

\*Researcher,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Political Sociology, Historical Sociology.